

추악한 교수직 사고팔기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인 대학 교수. 이들 교수는 학문의 전당 또는 시대 양심의 보루라 할 상아탑 안에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존경받는 스승으로 그 위상과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그래서 교수직은 학문탐구를 평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금쪽같은 청춘과 정열, 노력을 다 바치고도 쉽게 팔 수 없는 '학계의 별'로 일컬어진다.

일단 전임강사만 되면 사회적 명예는 물론이고, 대과가 없는 한 평생 신분이 보장되는 데다 조교수·부교수·교수 등 학계에서 탄탄한 앞날이 예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가 되는 길은 나타나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려워 입문경쟁은 박터질 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비좁은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학맥·지맥·혈맥·권맥이 작용하고 심지어는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에 이르는 뒷돈이 거래된다는 데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바늘귀 경쟁 뒷거래

최근에 밝혀진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진주전문대 등의 교수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그동안 술하게 소문으로만 떠돌던 '교수 매직'이 확인된 것으로 얼마 전까지 연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군 인사 부정과 함께 물밀에 잠겨 있던 '성역비리'의 하나였다.

더욱이 교수직 '사고팔기'는 인재를 키워낸다는 교육 본연의 관점에서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키는 것보다 더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김아무개(36)씨는 지난 4년 동안 서울에 있는 모교 등 2개 대학에 강사로 나가면서 교수 공채 때마다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의 전공인 영미철학이 새로 충원되는 영역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쪽과 교수들이 내세우는 거부 이유였다.

그런데 지난해 모교에서 실증철학분야에 1명을 증원하게 되었는데 예상외로 2년 후배가 선배를 제치고 전임강사로 뽑혔다. 학위나 연구경력·자질 면에서 당연히 선배강사들이 앞서는 것이 객관적 평가인데도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김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경우는 대학사회에 이미 깊게 뿌리내린 학연·지연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이는 학교 당국자나 영향력 있는 과 교수들이 자신과 가까운 고교·대학 후배 또는 제자들을 앉히기 위해 증원을 동결했다가 때맞춰 푸는 경우로, 경제력과 처세가 부족해 연줄을 잡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학연·지연 관계를 떠나 임용을 핑계로 기부금을 요구하는 곳은 거의가 사립대로, 지방대일수록 심하고, "몇장만 내라"는 단도직입형이 있는가 하면, "시설이 모자라 교육시키기가 어렵다"며 협조를 구하는 은근형도 있다.

서울대 박사 출신인 오아무개(32·여)씨는 지도교수가 백방으로 뛰어준 덕분



석장썸은...3천만원?...3억! 더러 돈, 더러 백...분규불씨

에 올해초 충남 사대에 채용이 내정됐다. 그 뒤 면접이 있었는데 대학의 총·학장, 교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학위논문 내용이나 학문영역 등이 아니라 오씨의 가정환경이었다.

"남편 직업이 무엇인가"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등이 질문의 주류를 이루었다.

심사가 끝난 뒤 재단 관계자와 단들이 마주앉았을 때 관계자는 "학교사정이 어려운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얼마면 되겠느냐"고 되물었더니 "적어도 3장은 돼야 한다"는 대답이었다. "3장이면... 3천만원 이나요?"라고 하자 그 관계자는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3억이지요"라고 정색을 하더라는 것이다.

오씨는 결국 교수 되기를 포기하고 요즘 집에 들어앉아 가사를 돌보고 있다.

김아무개(35)씨는 사대 면접시험 때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공개대답이 끝난 뒤 학교 관계자가 은근하게 "저희 학교는 열람도서가 부족하니 입교기념으로 책을 기증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순진한 김씨는 "어떤 종류로 몇권이냐 사서 드릴까요?"라고 물었더니 그 관계자의 눈빛이 갑작스럽게 싸늘해지더라는 것이다. 물론 그뒤 김씨에게 채용확정 통지서가 오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반면에 권력을 동원해 재단을 움직여 교수직을 판 '백교수'와 돈으로 교직을 얻은 '돈교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때 논문내용 뒷전

이 가운데 정부 고위직의 청탁메모지 3장을 이용해 교직을 차지한 7대 0 교수의 눈부신 활약상은 대학가에서 꾸준히 입에 오르내리는 일화다. 그는 당시 모든 연줄을 동원해 청와대 비서실장, 보사부장관, 교육부장관의 팔막한 사신을 학교재단에 집어넣었다. 보사부장관의 메모지는 의대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쪽으로는 무시 못할 압력수단이었다.

사대 7 교수는 돈많은 처가력을 톡톡히 본 경우로 집안이 어려우면 결혼이라도 잘 해야 대학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산경험'을 남겼다.

그는 어느 재력가의 사위가 된 뒤 돈을 들여 일사천리로 박사코스를 밟아 교직에 입문했는데 채용과정에서도 상당한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립대에서 교직원 채용 조건으로 이런 기부금 명목의 '성의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체능계와 의대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예체능계의 경우 강사직을 놓고도 수백만~수천만원의 뒷돈 거래가 성행한다. 이는 최소한 강사를 맡아야 고액 레슨을 할 수 있다는 먹이 사슬구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련의 과정에서부터 뇌물이 오가는 의대의 경우 성형·안과·파부와 등 인기분야는 1억원 이상의 고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정설로 되어 있다.

요즘 들어 교수임용에 뇌물이나 '끈' 등의 외부변수가 전보다 더 강하게 개입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90년 3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사학의 부실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사학법인연합회의 로비로 민자당이 변칙통과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은 종래 총장이 가졌던 교수임면권을 재단에 넘겨 재단의 학사행정 지배력을 강

화시켰다.

이에 더해 육영보다는 영리에 급급한 각 재단들이 보조금을 내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채용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측근 보직교수들의 힘을 빌려 이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난을 들어 교수직을 늘리는 데 소극적인 데다 국내외 석·박사학위를 획득한 고급인력들이 크게 늘어나 교수자리를 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용비리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의 모금행위도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한다.

이런 사례는 교육부가 지난 89~91년 성균관·중앙·한양·건국대 등 12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개정법 재단전횡 뒷받침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 이 기간 동안 교원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심사절차나 규정·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비공개 특채를 하거나 부적격자·비전공자를 임용한 숫자는 모두 1백75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은 재단 친인척이나 전공심사에서 탈락한 사람, 또는 고급관료 출신 자녀들을 임용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무보수 근무를 이런저런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으로 교수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 사대, 강원 사대와 경기 사대, 충남 사대 등에서는 교수자질 시비가 먼저 학생들이 학과장 등 보직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대학가의 분규쟁점이 되어왔다.

또 일반 교수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불신감이 널리 번지고 있는데 경북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대학 재직 교수 7백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 인사 등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5.1%가 교수 신규공채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 69.5%가 학맥 등 파벌·정실인사를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능력있는 신진 연구자들의 학문생산의 길을 가로막는 '교수 매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용대상자들의 학문적 성과와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특별심사기구 등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감사·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각 대학이 공채의 기준인 세부전공, 연구경력 등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이에 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용대상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한학기 정도 공개강의를 맡긴 뒤 학생들의 반응이나 평가를 나름대로 감안하는 방안을 도입해 교수 거래로 오염되는 학원의 학문적 전통과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영일 기자